

#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2-11
----------	-------

제안년월일 : 2012. 3. 6.  
제안자 : 운영위원장

## 1. 제안경위

2012. 3. 6. 제16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종수 위원 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주 문

마포구의회는 40만 구민과 함께 지난 2012년 2월 중국 선양에서 체포된 10여명과 3월 중국과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추가 체포된 4명을 포함한 중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이 인도주의와 보편적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계속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별첨과 같이 결의한다.

## 3. 제안이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제법상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선양에서 체포된 10여 명 중에는 국내에 가족이 있는 사람과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고, 최근 이들 체포된 북한이탈주민 일부가 이미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3월에 추가 체포된 4명 중에는 심지어 20일 밖에 안 된 갓난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포함되어 있어, 만약 중국이 갓

난아기와 산모까지 강제로 북송한다면 온 국민의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이 극(極)에 달하게 되어 결국 한·중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이에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반인륜적·비인도적인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난민협약 등 국제조약 준수 요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중국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제사회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임.

#### 4. 보낼 곳

대한민국 중앙정부 각 부처, 대한민국 국회, 각 지방자치단체,  
주 대한민국 중국대사.

##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지난 2012년 2월 중국 선양에서 체포된 10여명(국내에 가족이 있는 사람과 미성년자 등)과 3월 중국과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추가 체포된 4명(20일 밖에 안 된 갓난아이와 아이 부모)을 포함한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이 인도주의와 보편적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계속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마포구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중국의 강제북송행위에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중국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아울러 우리정부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마포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거듭된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북송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들을 강제북송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마포구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제 북송되는 경우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 및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국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지위에대한협약」과 「고문방지협약」

- 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마포구의회는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정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북송 중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들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4. 마포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계속되는 강제북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12. 3.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